

POLICY iSSUE REPORT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위한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위한 연구

연구진

김봉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여효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서론	
	1. 연구배경	04
	2. 연구목적	05
II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지방분권의 개념 및 측정	06
	2. 시사점	11
III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수준 분석	
	1.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수준 측정지표	13
	2.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수준 분석결과	15
IV	요약 및 정책제언	39
	참고문헌	44



서론

1. 연구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수준 강화를 위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및 능률성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20)
 - 이를 위해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원칙,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 26개 관련 법령들을 신설 및 개설했음
- 자치분권 혹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간 관계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 왔음¹⁾
 - 예를 들어 정부 간 재정관계의 경우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 수준으로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 하에 재정분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세 부분인 4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 간 사무배분의 경우 역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가 모호하여 사무중복이 심각하고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임(박재희·김지수, 2020)

1) 홍준현·하혜수·최영출(2006)은 지방분권화와 유사한 개념들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 개념들 중 자치권은 분권화와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

- 기초자치단체의 분권수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광역만이 아닌 중앙-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지방분권 수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분권수준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분권수준 격차 완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분권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권을 의미함
-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 지방분권 개념 및 측정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주요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 측정지표 도출
 -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의 분권수준 파악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간 분권수준 완화 방안 제시

II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지방분권의 개념 및 측정

지방분권의 개념

- 지방분권 혹은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 Schneider(2003)은 중앙정부가 재정, 행정,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더 적은 역할을 하는 체제로 분권화를 정의
 - 임명배(2003)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분권화를 정의
 - 홍준현·하혜수·최영출(2006)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의 정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분권화를 정의
 - Hooghe et al.(2016)은 특정 시기에 특정 정치 행위자와 정책 영역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권화를 간주
 - OECD(2019)는 중앙정부로부터 하위정부 수준에서의 선출된 당국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전하는 것으로 분권화를 정의
- 정부 간 권한배분 뿐 아니라 권한의 행사 수준과 주민의 참여를 포함한 개념으로 지방분권 수준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음
 - 지방분권의 정의에 대한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의 배분 정도로,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첫 번째는 소극적인 접근방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두 번째인 적극적 접근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권한행사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 금창호·강영주·윤태섭(2016)은 비록 실정법에서 지방분권을 소극적 접근방법에 바탕을 두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고려할 경우 지방정부에 이양된 권한에 대한 행사 노력까지 포괄하는 적극적인 접근방법으로 지방분권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
- 또한 박재희·김지수(2020)는 정부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요소로 파악하고 있음

지방분권의 중요성

- 지방분권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음(김성배, 2005)
 - 국가운영에 있어 통합관리시스템이 분권·분업형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조직 운영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인 관리방식보다는 분업적 관리방식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²⁾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가진 지방정부가 주요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종 권한의 이양에 따른 지방분권은 이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활성화 되려면 제도적인 장려 및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2) 반면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불안정성, 지방정부 관료들의 부패와 예산지출에 대한 무책임성 등으로 인해 지방분권(특히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함. 실제로 지방분권과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생산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연구들의 경우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분석 기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 더 자세한 논의는 Rodríguez-Pose and Ezcurra(2011), Nguyen et al.(2019)을 참고

지방분권의 측정

- 앞서 논의한 지방분권 수준은 연구자들뿐 아니라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측정되고 있음
 - 측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역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을 측정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동일한 영역 내에서도 연구마다 측정지표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음
- 국외연구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fiscal), 행정(administrative), 그리고 정치(political)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권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 [표 1-1]은 OECD(2019)와 Harguindéguy et al.(2021)의 연구에서 분류하고 있는 각 영역별 구성요소 및 측정지표를 나타내고 있음
 - 세 가지 측정영역 중 자료의 신뢰성과 비교의 용이성 때문에 재정분권에 대한 지표가 분권수준 측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 하지만 재정분권에 대한 지표는 정부 간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분권에 대한 지표를 통해 이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재정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분권 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분권 영역 역시 지방분권의 논의에 포함되고 있음
 - 정치분권은 일반대중 혹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공공의사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의사결정이 소수의 중앙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 보다 다수의 참여자들에 의해 결정될 때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정함

• 표 1-1 | 지방분권 지표관련 주요 국외연구 •

구분	측정영역		
	재정분권	행정분권	정치분권
OECD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예산 및 회계 • 지출(지출권한) • 수입(충분성 및 적절성) • 재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성(공동 및 자체책임) • 기능(규제, 운용, 재무결산) • 자체인력수준 • 공유재산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직 (의회 및 행정부의 속의성) •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 • 주민참여 • 책임성과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wn budget and accounting • Expenditure (spending power) • Revenue (sufficient and adequate) • Fiscal ru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ponsibilities (shared and exclusive) • Functions (regulating, operating financing and reporting) • Own staff • Own ass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ed authorities (deliberative assemblies and executive bodies) • Decision-making and enforcement powers • Citizen's participation •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Harguindéguy et a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 및 지출에 대한 지방 정부의 통제권 • 정부 간 이전재원 • 무조건부 국고보조금 • 지방정부의 차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정도 • 지방정부의 인사규모 • 공공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통제권 • 정부 간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헌법 존재 유무 • 하위 국가 계층 존재 유무 •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선거 •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b-state control over revenue/expenditure • Intergovernmental transfers • Central transfers (unconditional) • Sub-state borrowing capa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ntral policy supervision • Sub-state's employees • Sub-state control over public policies • Intergovernmental meet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mal federal constitution • Sub-state tiers of government • Election of sub-state units • Constitutional guarantee

- 국내연구들의 경우 국외연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측정영역을 좀 더 다양화·세분화하여 지방분권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표 1-2]는 지방분권 지표를 측정한 국내연구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

- 국내연구들의 경우 국외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재정분권에 대한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조직분권과 행정분권에 대한 지표들이 일부 개발되어 있는 반면에 입법분권에 대한 지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금창호·강영주·윤태섭, 2016)

• 표 1-2 | 지방분권 지표관련 주요 국내연구 •

구분	측정영역	주요 측정지표
김익식 (1990)	구조적 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의 총 수 인구 10만 명당 지방정부 수 지방정부당 평균인구규모
	기능적 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일반회계 중 지방정부지출비율 총교육비지출 총주택·지역후생비지출
	재정적 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세입 중 지방정부세입 비율 정부 자체세입 중 지방세입 비율
	인사적 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비율
박정수 (1993)	인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정부공무원 비율
	기능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적 권한이양의 정도
	구조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단위의 밀집도 등
원구환 (2002)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교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조직권의 법제도적 검토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과 지방의 예산규모 및 비율 국세 및 지방세 비중
박미옥 (2005)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자립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공공재/공공서비스 공급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지출 규모
	지방분권과 재정분권화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재원 대비 자체재원 규모
홍준현·하혜수·최영출 (2006)	조직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 간 인적자원배분 조직·인사에 대한 국가의 관여
	사무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 간 사무배분 사무배분의 내실화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 지출 지방정부 세입 지방재정운영의 재량성
손희준 (2011)	세입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비율 재정자립도
	세출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출규모 비중 일반재원 비중

출처 : 금창호·강영주·윤태섭(2016) 수정

- 금창호·강영주·윤태섭(2016)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대상으로 빈도가 가장 높게 사용된 지표를 추출하여 각 영역별 대표 측정지표를 제시하였음
 - 행정영역에 대한 측정지표로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 비율과 자치사무 비율을, 조직 영역에 대한 측정지표로는 전체 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과 지방배치 국가공무원 비율을, 그리고 재정영역에 대한 측정지표로 중앙과 지방간 세입/세출배분과 재정 자립도를 제시함

2. 시사점

- 이상의 지방분권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음
- 지방분권에 대한 정의는 연구의 대상 및 목적 그리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력의 배분정도라는 기본적인 성질 위에 추가적인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정의를 확장시킬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① 상위정부와 하위정부 간 권한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② 지방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③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의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 지방분권 수준의 측정 또한 연구의 배경에 따라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국외연구들과 같이 지방분권을 재정, 행정, 정치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에 속하는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도 있고 국내연구들과 같이 특정 측정영역을 좀 더 다양화·세분화 하여 평가할 수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외연구들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분류방식을 따라 앞에서 언급한 지방분권 개념을 재정, 행정, 정치의 영역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정부계층 간 권한배분의 수준은 재정분권 영역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행사 수준은 행정분권 영역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수준은 정치분권 영역으로 나누어서 파악하고자 함
- 측정지표 선정에 있어서 지표의 대표성뿐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국가 간 비교나 특정 국가 내 중앙-지방 간 비교를 통해 분권수준을 분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지표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석단위 간 편차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된 측정지표가 분권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인지에 대하여 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경상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권수준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 분석단위 간 지표의 편차가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존재하는 문제점이 존재함³⁾
 - 즉, 연구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지표를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대표성뿐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도 고려하여 분권수준을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인구수로 지표를 표준화 할 경우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 대하여 지표 결과가 유리하게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함

III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수준 분석

1.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수준 측정지표

-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표 2-1]에 나타난 영역 및 측정지표를 이용해서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의 분권수준을 측정하고자 함
- 재정분권은 Vo(2009)의 연구에서 이용한 재정분권지수를 통해 측정함⁴⁾
 - 재정분권지수는 재정자율성과 재정중요성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정의가 되는데 재정자율성은 “해당 시·군 자체수입/해당 시·군 세출”을 의미하고 재정중요성은 “해당 시·군 세출/경상남도 세출”을 의미함
 - 재정자율성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총세출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클수록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나타냄
 - 재정중요성은 경상남도의 총세출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 비율이 증가할수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함
 - 재정분권지수 값이 클수록 재정분권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행정분권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전체 사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비율로 측정

4) 곽태열(2012)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정분권지수를 바탕으로 2002-2010년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분권수준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유형은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로 분류할 수 있음
- 위임사무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신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사무로 상급정부의 지휘·감독에 의해 사무처리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권한을 크게 행사하지 못하는 반면 고유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적 부담 하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 고유사무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무권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표 2-1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측정방법 •

영역	측정	지표	데이터	기준연도	방향성
재정	재정분권지수	$\sqrt{\text{재정자율성} \times \text{재정중요성}}$	지방재정 365	2019	상향지표
행정	사무 수행의 자율성	$\frac{\text{해당 기초자치단체 고유 사무 수}}{\text{해당 기초자치단체 전체 사무 수}}$	경상남도 내부자료	2020	상향지표
정치	정치적 참여	해당 기초자치단체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선거관리위원회	2018	상향지표

주 : 재정자율성은 “해당 시·군 자체수입/해당 시·군 세출”로 정의되고 재정중요성은 “해당 시·군 세출/경상남도 세출”로 정의됨. 상향지표는 값이 클수록 바람직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함.

- 정치분권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로 측정
 -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로 4년마다 선거가 치러지며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는 2018년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임
 - 지방자치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대한 참여율이 높을수록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 수준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상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경상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분권수준 현황을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함
 - 각 영역에 속하는 측정지표의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점수(Z-score)를 이용하여 지표를 분석하였음⁵⁾
 - 분석은 본청을 제외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비교는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뿐 아니라 시와 군으로 분류하여 유형 내에서의 비교도 수행하였음

2.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수준 분석결과

영역별 결과

- [표 2-2]에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분권수준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음
 - 재정분권의 경우 분권수준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로 나타났고 김해시와 양산시도 분권수준이 창원시 다음으로 높은 반면 남해군과 함양군의 분권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림 2-1]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경상남도 전체 지역을 살펴봤을 때 시의 재정분권 수준이 군의 재정분권수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분권의 경우 분권수준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전체사무에서 자체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99.81%를 보인 함안군으로 나타났고 함안군을 이어 진주시와 의령군의 분권수준도 높은 반면 합천군과 창원시의 분권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합천군의 경우 자체사무의 비율이 3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5) 표준점수는 "(관측치-모집단 평균)/모집단 표준편차"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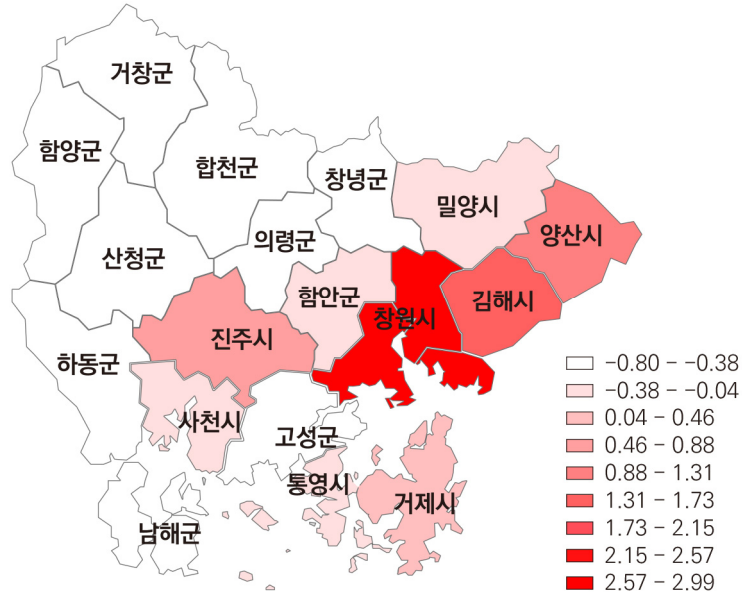
- [그림 2-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행정분권의 경우 재정분권과는 다르게 시와 군 사이의 결과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음
- 정치분권의 경우 분권수준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2018년 전국지방선거에서 79.7%의 투표율을 기록한 의령군으로 나타났고 하동군과 함양군의 분권수준이 의령군 다음으로 높은 반면 김해시와 양산시의 분권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 2-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치분권의 경우 재정분권과는 반대로 군의 정치분권수준이 시의 정치분권수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2-2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영역별 분석결과 •

단체명	영역								
	재정			행정			정치		
	원점수	표준점수	순위	원점수	표준점수	순위	원점수	표준점수	순위
창원시	0.24	2.99	1	80.22	-0.45	17	64.98	-0.92	15
진주시	0.12	0.75	4	99.65	0.77	2	67.70	-0.49	12
통영시	0.07	-0.27	8	87.56	0.01	12	66.00	-0.76	14
사천시	0.08	0.00	6	95.73	0.52	5	69.30	-0.24	11
김해시	0.16	1.53	2	84.26	-0.20	13	60.00	-1.70	18
밀양시	0.08	-0.10	7	90.63	0.20	10	66.70	-0.65	13
거제시	0.10	0.34	5	82.67	-0.30	15	63.00	-1.23	16
양산시	0.13	0.94	3	81.80	-0.35	16	60.80	-1.57	17
의령군	0.04	-0.73	15	98.59	0.70	3	79.70	1.39	1
함안군	0.06	-0.35	9	99.81	0.78	1	71.20	0.06	9
창녕군	0.06	-0.44	10	98.02	0.66	4	70.50	-0.05	10
고성군	0.05	-0.50	11	88.92	0.09	11	73.10	0.35	8
남해군	0.04	-0.80	18	94.23	0.43	7	77.30	1.01	4
하동군	0.05	-0.63	13	90.96	0.22	9	79.30	1.32	2
산청군	0.04	-0.73	16	94.33	0.43	6	76.10	0.82	6
함양군	0.04	-0.78	17	84.15	-0.21	14	77.90	1.10	3
거창군	0.05	-0.61	12	93.38	0.37	8	74.50	0.57	7
합천군	0.05	-0.63	14	28.88	-3.67	18	77.10	0.9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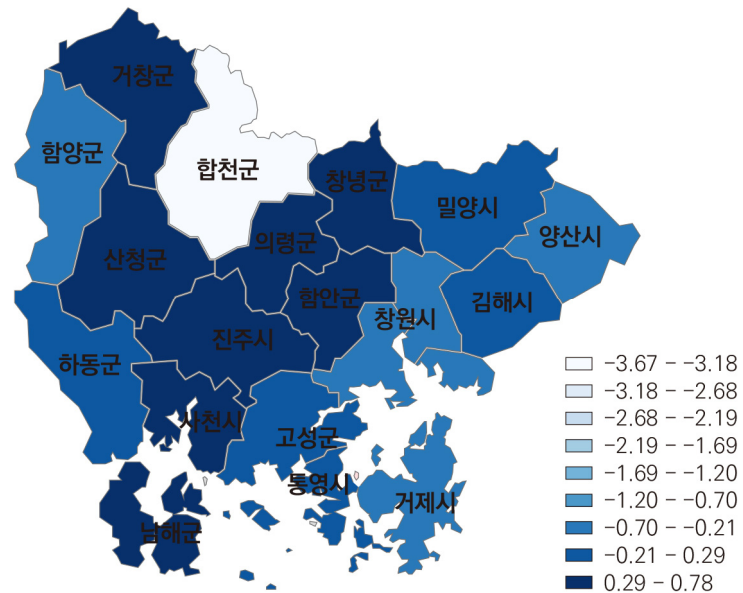
주 : 행정영역과 정치영역의 원점수에 대한 단위는 %임

• 그림 2-1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재정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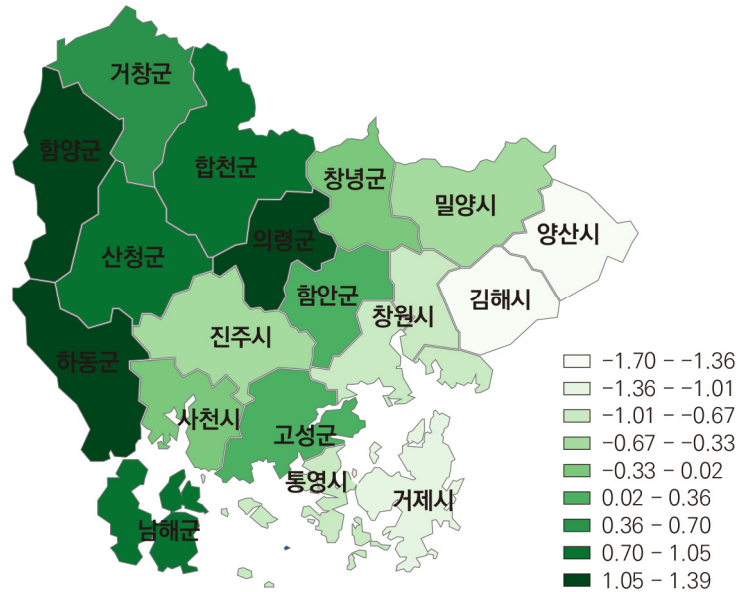
주: 표준점수에 따른 분류를 나타냄

• 그림 2-2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행정분권 분석결과 •



주: 표준점수에 따른 분류를 나타냄

• 그림 2-3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정치분권 분석결과 •



주: 표준점수에 따른 분류를 나타냄

종합결과

- [표 2-3]에 [표 2-2]의 영역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수준의 종합결과가 나타나있음
 - 종합결과는 각 영역별 표준점수의 평균으로 계산되었는데 표준점수는 표준화된 평균값인 0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리 위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의 점수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이해할 수 있음⁶⁾
 - 경상남도에서 지방분권수준이 가장 높은 단체는 창원시로 나타났는데 창원시의 경우 특히 높은 재정분권수준으로 인해 종합적인 순위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판단됨

6) 각 영역에 대한 가중치는 1/3로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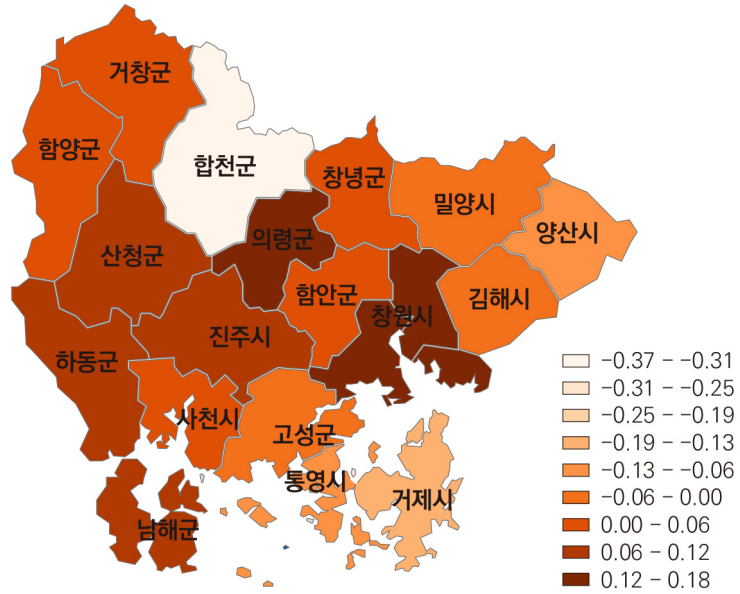
- 창원시 다음으로 높은 지방분권수준을 나타내는 단체는 정치분권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의령군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진주시, 하동군, 남해군도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지방분권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단체는 합천군으로, 특히 행정분권영역에서의 낮은 점수가 전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침
- 합천군에 이어 거제시, 통영시, 양산시 순으로 낮은 지방분권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체는 정치분권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표 2-3]에 나타난 순위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 7개 단체가 군으로 시에 비해서 군의 지방분권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도출되었음
- [그림 2-4]은 [표 2-3]에 나타난 순위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음

• 표 2-3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분석결과 •

단체명	순위	종합점수	재정	행정	정치
창원시	1	0.18	2.99	-0.45	-0.92
진주시	3	0.11	0.75	0.77	-0.49
통영시	16	-0.11	-0.27	0.01	-0.76
사천시	9	0.03	0.00	0.52	-0.24
김해시	13	-0.04	1.53	-0.20	-1.70
밀양시	14	-0.06	-0.10	0.20	-0.65
거제시	17	-0.13	0.34	-0.30	-1.23
양산시	15	-0.11	0.94	-0.35	-1.57
의령군	2	0.15	-0.73	0.70	1.39
함안군	7	0.05	-0.35	0.78	0.06
창녕군	10	0.02	-0.44	0.66	-0.05
고성군	12	-0.01	-0.50	0.09	0.35
남해군	5	0.07	-0.80	0.43	1.01
하동군	4	0.10	-0.63	0.22	1.32
산청군	6	0.06	-0.73	0.43	0.82
함양군	11	0.01	-0.78	-0.21	1.10
거창군	8	0.04	-0.61	0.37	0.57
합천군	18	-0.37	-0.63	-3.67	0.98

주 : 각 영역별 점수는 표준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종합점수는 영역별 점수의 평균을 의미함

• 그림 2-4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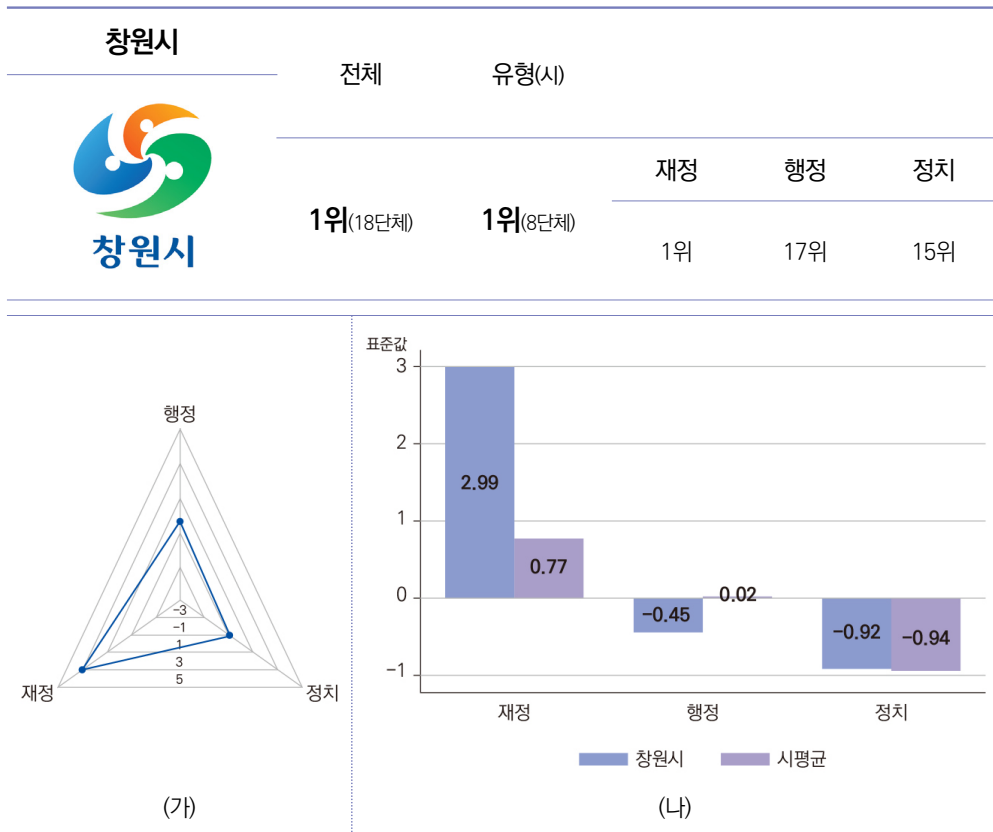


주: 표준점수에 따른 분류를 나타냄. 종합점수는 각 영역 별 표준점수의 평균을 의미함

단체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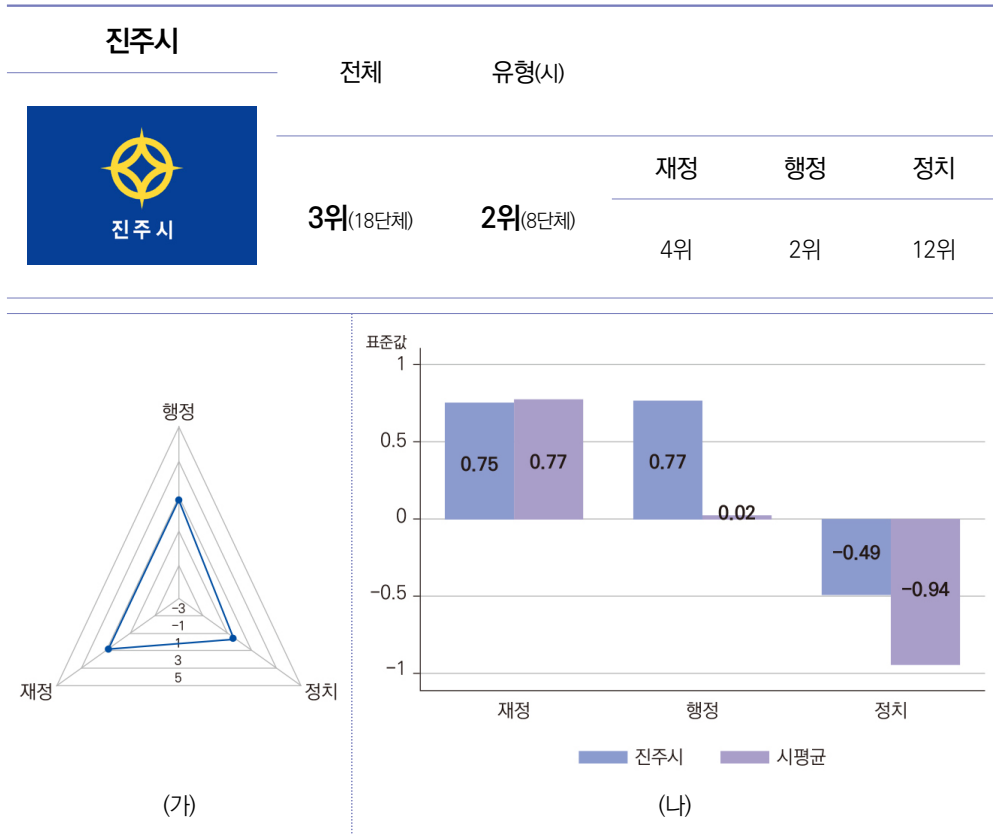
- [그림 2-5]~[그림 2-22]에 지방자치단체별 결과가 나타나있음⁷⁾
 - 창원시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1위, 유형 내(시) 1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1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17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15위로 행정 및 정치분권에서 낮은 순위를 나타냈지만 재정분권수준이 크게 높아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임

• 그림 2-5 | 창원시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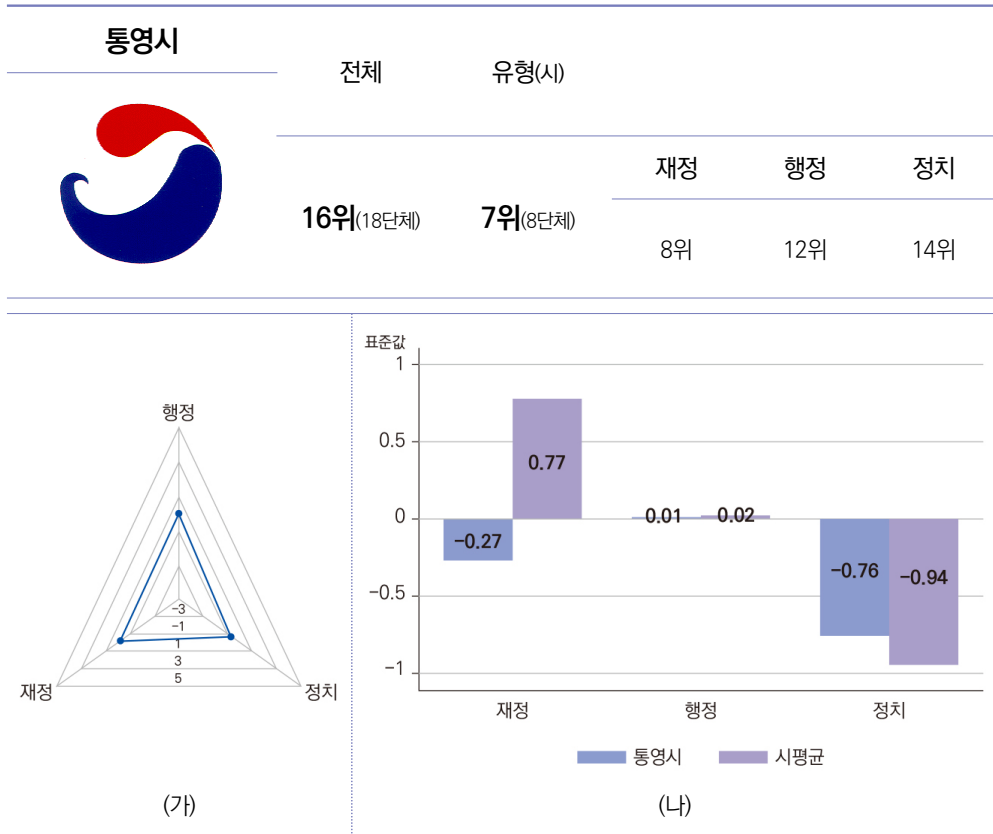
7)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순위는 각 영역별 표준점수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의 표준점수가 매우 클 경우 전체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림 2-6 | 진주시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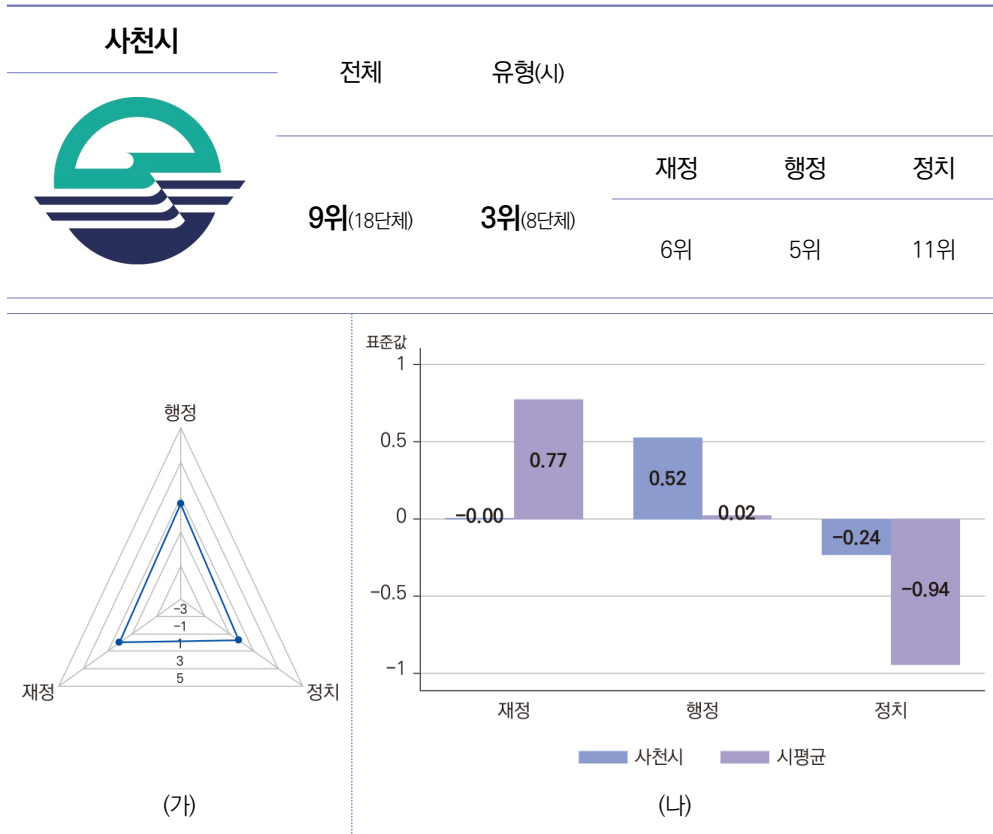
- 진주시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3위, 유형 내(시) 2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4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2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12위로 행정분권에 있어서 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그림 2-7 | 통영시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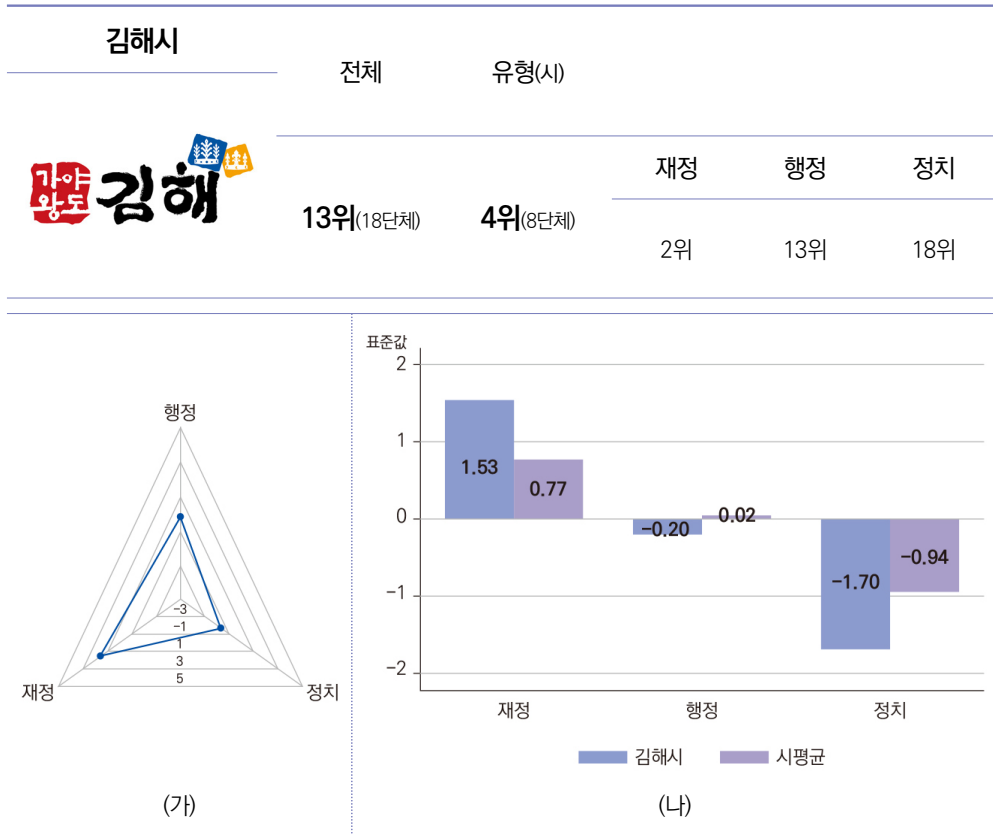
- 통영시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16위, 유형 내(시) 7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8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12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14위로 재정분권수준이 유형단체(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8 | 사천시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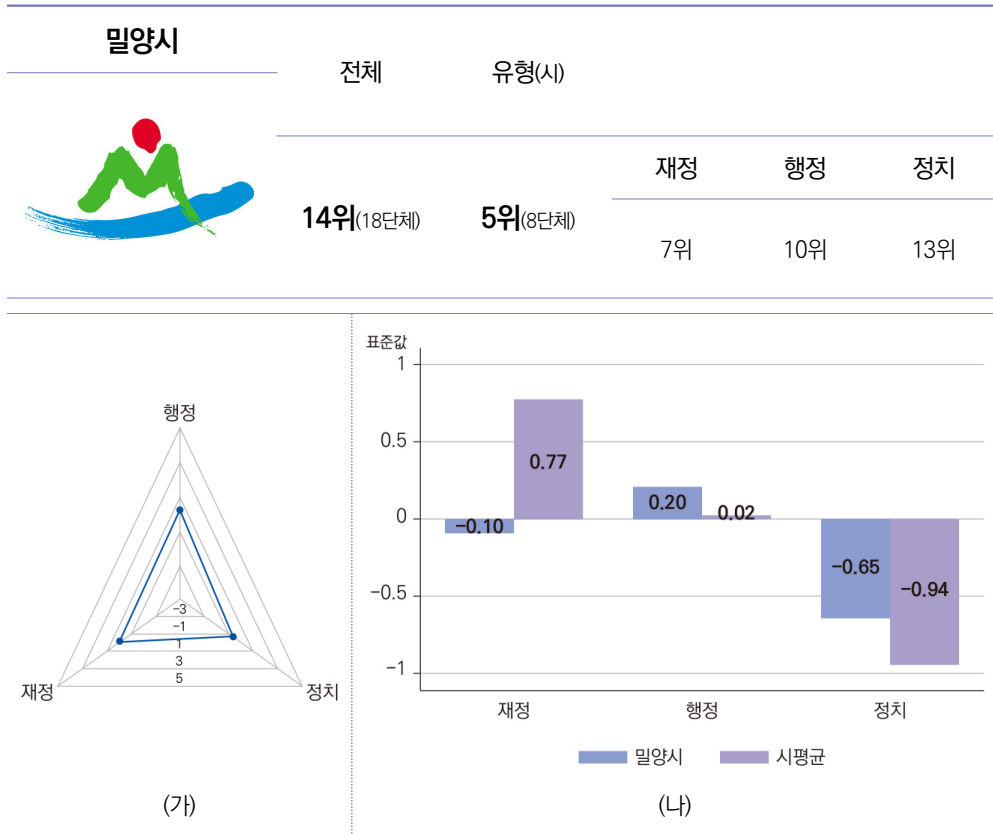
- 사천시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9위, 유형 내(시) 3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6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5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11위로 행정분권수준이 재정 및 정치분권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9 | 김해시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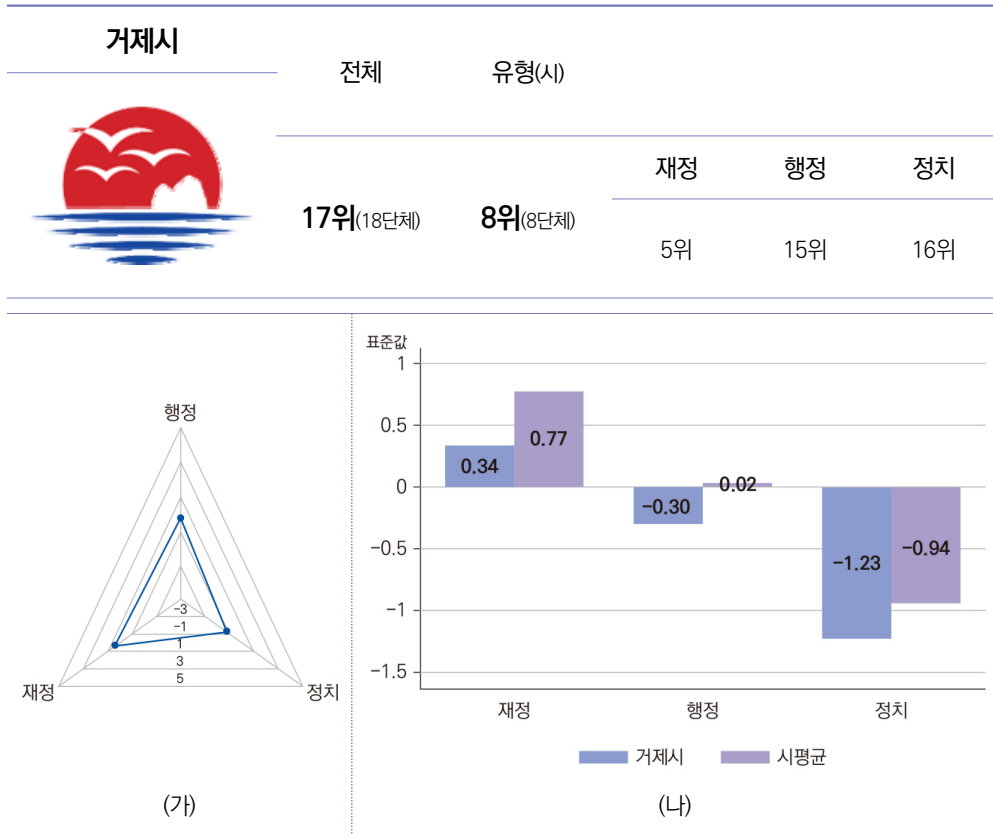
- 김해시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13위, 유형 내(시) 4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2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13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18위로 재정분권수준은 우수한 반면 행정 및 정치분권수준이 낮게 나타나서 전반적인 순위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그림 2-10 | 밀양시 지방분권 분석결과 •



- 밀양시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14위, 유형 내(시) 5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7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10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13위로 특히 유형단체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재정분권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림 2-11 | 거제시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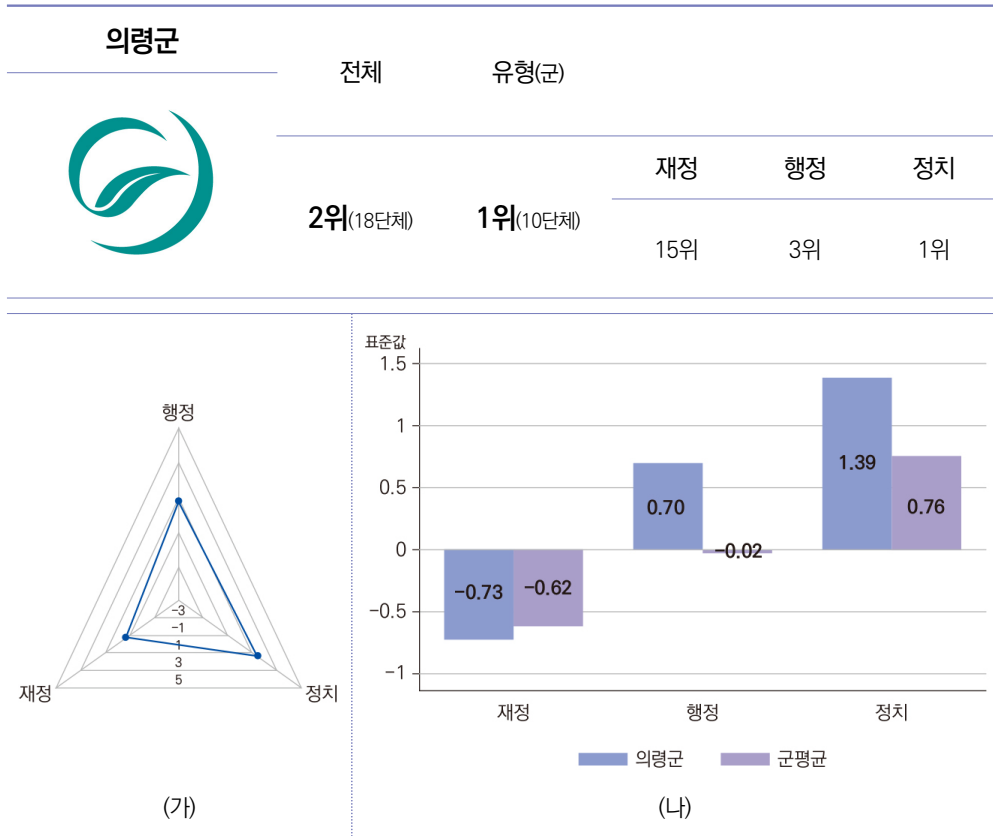
- 거제시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17위, 유형 내(시) 8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5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15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16위로 행정 및 정치분권수준이 경상남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그림 2-12 | 양산시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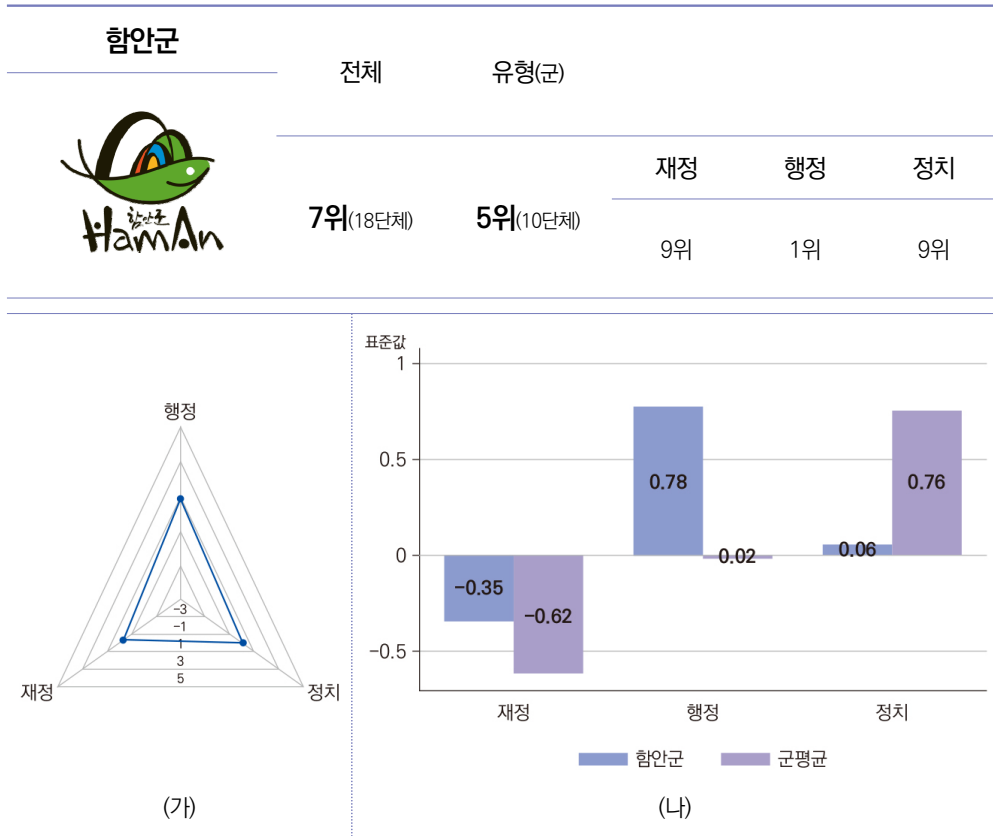
- 양산시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15위, 유형 내(시) 6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3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16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17위로 거제시와 마찬가지로 행정 및 정치분권수준이 경상남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그림 2-13 | 의령군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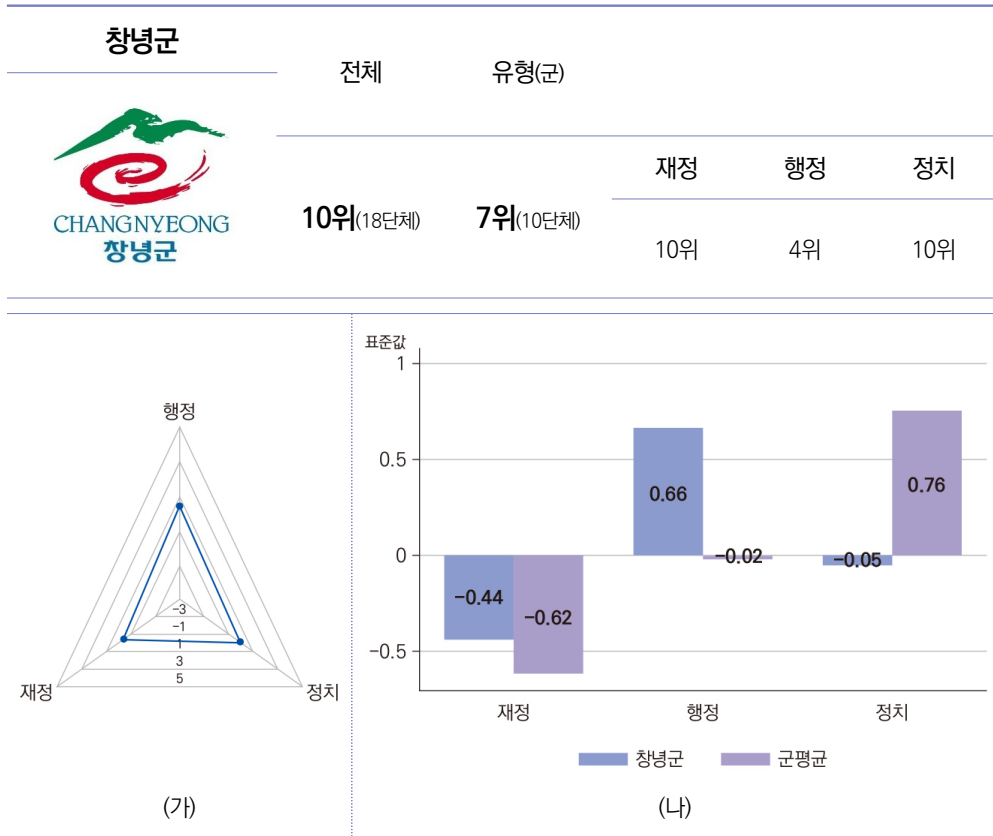
- 의령군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2위, 유형 내(군) 1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15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3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1위로 재정분권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행정 및 정치영역에서 상당히 높은 분권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창원시 다음으로 지방분권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14 | 함안군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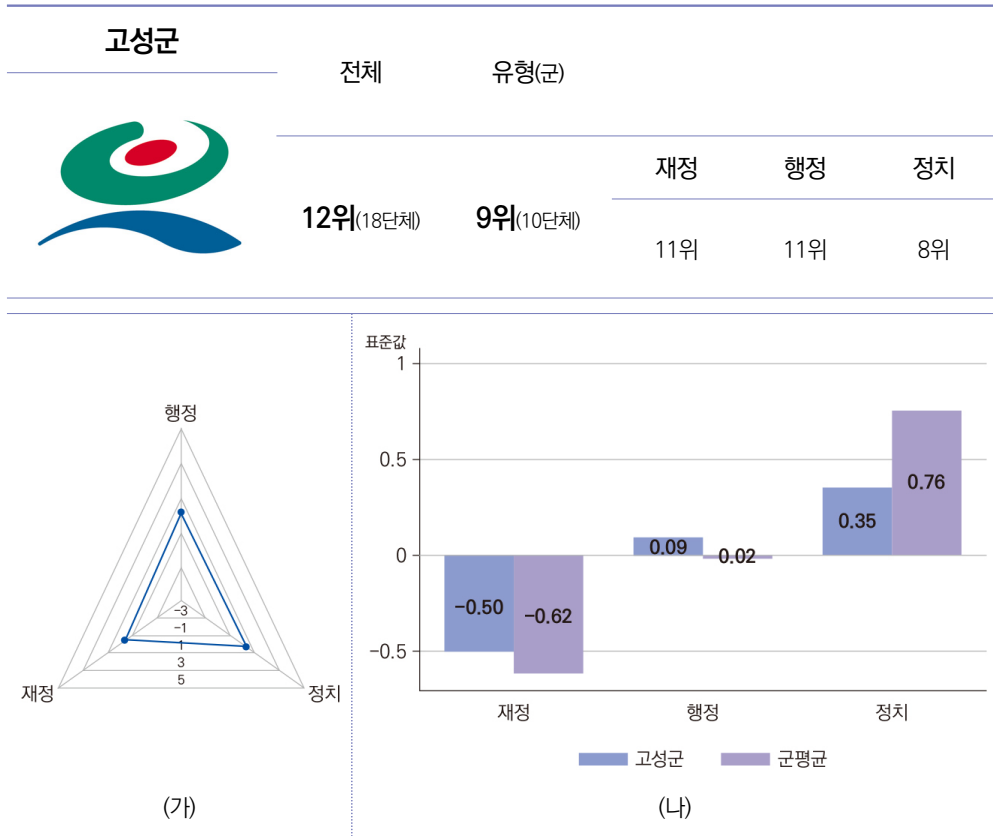
- 함안군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7위, 유형 내(군) 5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9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1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3위로 특히 행정분권수준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15 | 창녕군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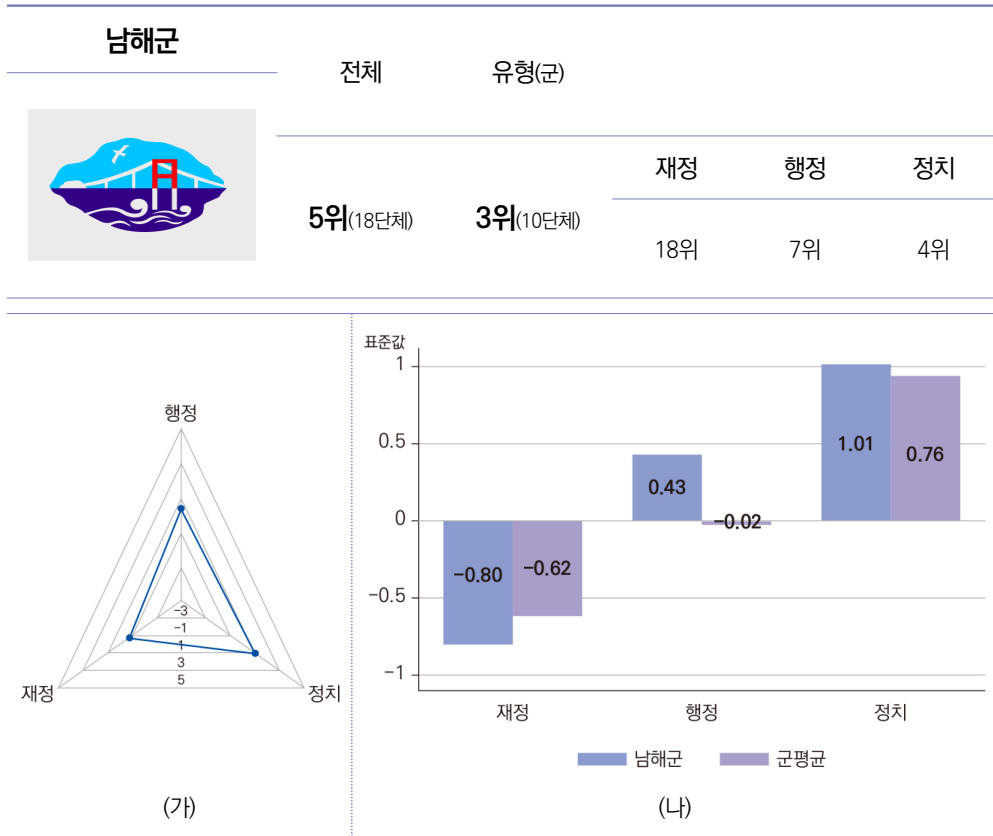
- 창녕군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10위, 유형 내(군) 7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10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4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10위로 함안군과 유사하게 행정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림 2-16 | 고성군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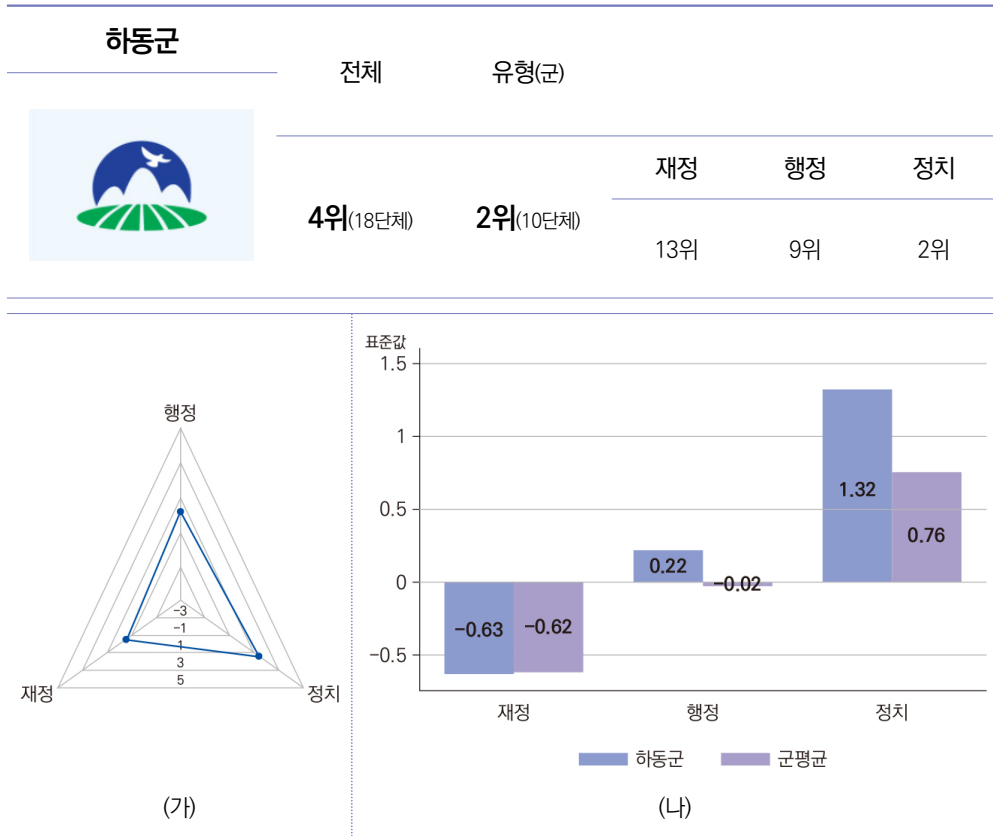
- 고성군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12위, 유형 내(군) 9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11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11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8위로 정치분권수준이 유형평균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17 | 남해군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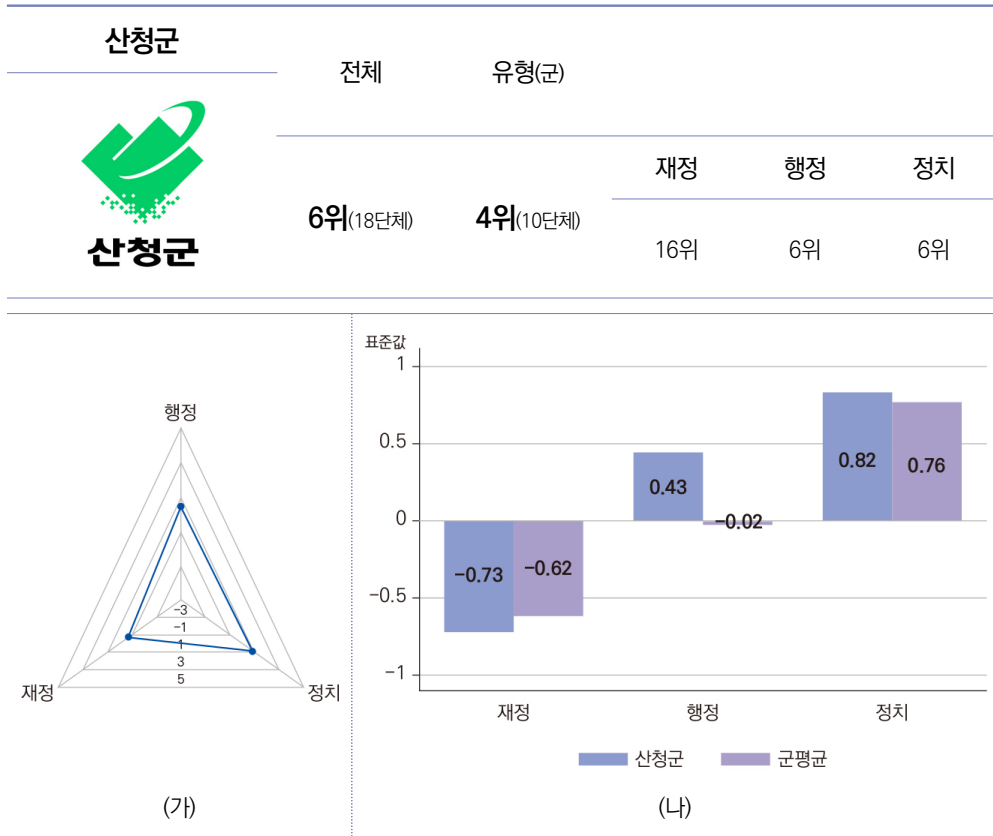
- 남해군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5위, 유형 내(군) 3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18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7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4위로 재정분권수준은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행정 및 정치영역에서의 분권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그림 2-18 | 하동군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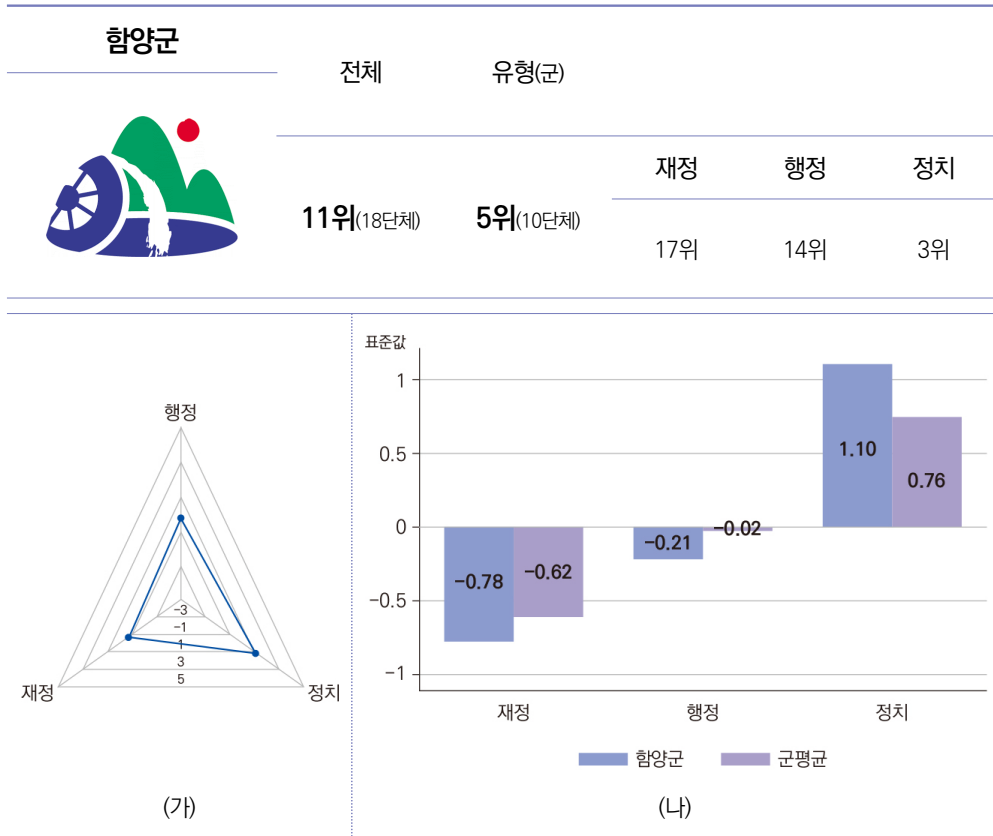
- 하동군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4위, 유형 내(군) 2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13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9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2위로 정치영역에서의 분권수준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19 | 산청군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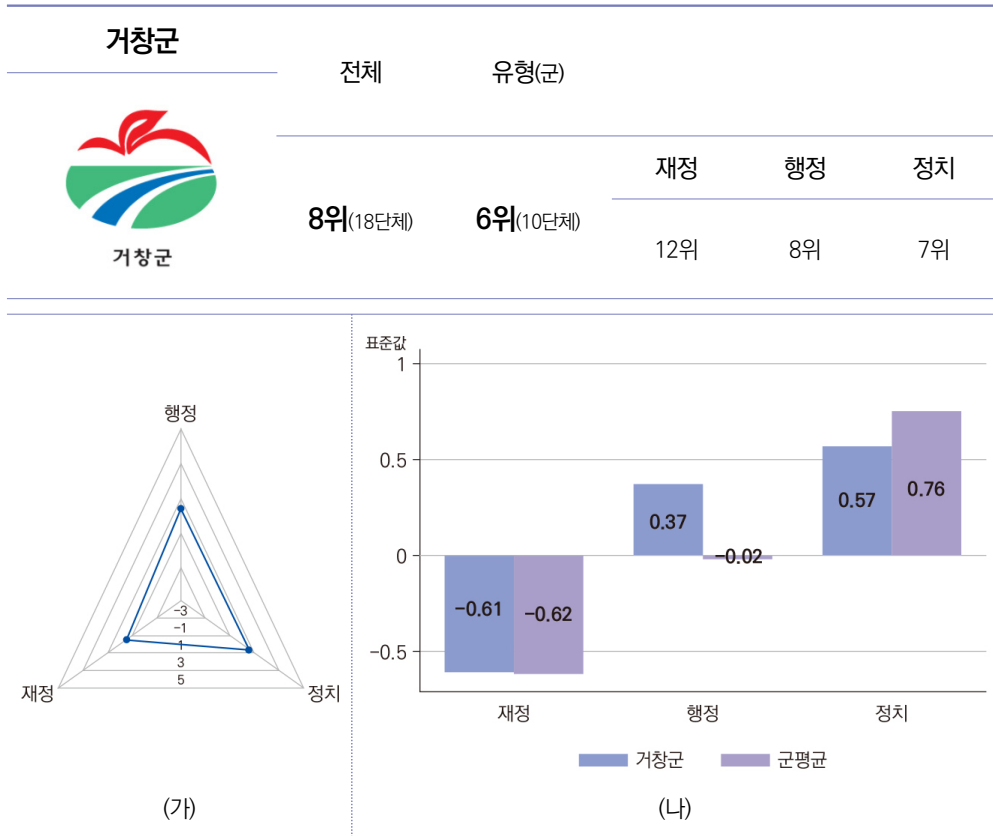
- 산청군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6위, 유형 내(군) 4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16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6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6위로 다소 미흡한 재정분권수준에 비해 행정 및 정치분권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림 2-20 | 함양군 지방분권 분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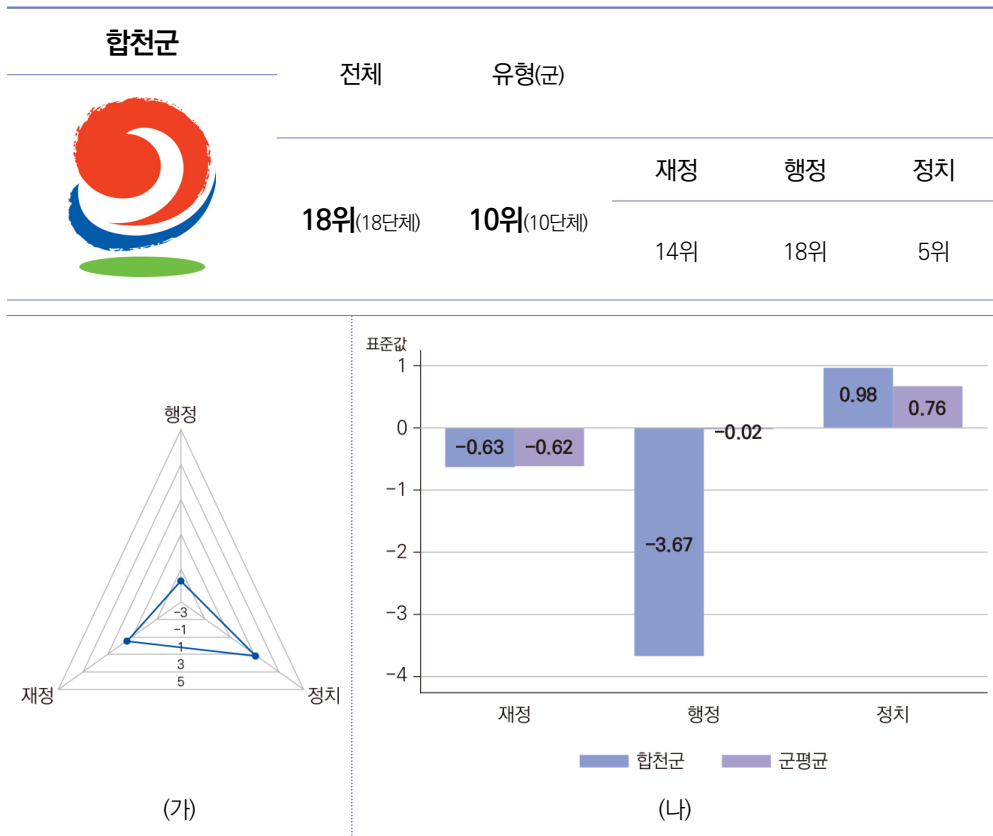
- 함양군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11위, 유형 내(군) 5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17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14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3위로 재정 및 행정분권수준은 유형평균보다 낮지만 정치분권수준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림 2-21 | 거창군 지방분권 분석결과 •



- 거창군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8위, 유형 내(군) 6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12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8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7위로 재정분권수준은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행정 및 정치분권수준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중간정도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음

• 그림 2-22 | 합천군 지방분권 분석결과 •



- 합천군의 지방분권수준은 전체 18위, 유형 내(군) 10위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은 전체 14위, 행정분권수준은 전체 18위, 정치분권수준은 전체 5위로 재정 및 정치영역의 분권수준이 유형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영역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 전체적인 순위가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음

IV

요약 및 정책제언

연구요약 및 분권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 본 연구는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권수준을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분권수준 격차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분권수준은 재정, 행정, 그리고 정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재정분권은 Vo (2009)의 연구에서 이용한 재정분권지수를, 행정분권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전체 사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비율을, 그리고 정치분권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을 통해 각각 측정하였음
 -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 기준으로 각 영역에 대한 측정을 실행하였음
- 재정분권은 재정자율성과 재정중요성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순위가 인구순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분권수준에서 상위 5개 도시인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는 경상남도 내에서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할 경우 순위가 동일함
 - 재정분권수준에서 하위 5개 도시인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합천군 역시 경상남도 내에서 인구가 적은 순서대로 나열할 경우 순위는 다르지만 해당되는 단체는 동일함
 - 따라서 재정분권수준은 결국 해당 단체의 인구 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정분권을 판단하는 재정자율성은 자체수입비율이므로 인구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재정중요성 역시 경상남도 전체 세출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인구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임

- 재정분권의 경우 창원시와 김해시를 제외하고는 그 격차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창원시의 z점수가 2.99로 재정분권 점수가 매우 높은 것을 제외한다면, 6위인 사천시 평균 수준이고, 평균보다 낮은 12개 기초자치단체들의 z점수는 0~-0.8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이는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이 넘는데 비해 2위인 김해시가 55만 명으로 격차가 큰 반면, 9위 이하인 군 단위의 경우에는 3만 명에서 6만 명 수준으로 인구 격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창원시 및 김해시와 타 시군의 격차는 인구 수준의 격차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나머지 자치단체들의 경우 자체수입의 확보여부가 재정분권을 좌우하고 있음이 확인됨
 - 통영시의 경우 사천시나 밀양시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이는 통영시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자체수입이 감소한 결과로, 관광업 등 자치단체의 주력산업을 다변화하여 경기에 따른 자체수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군 단위에서도 인구 순서로는 경남에서 가장 적은 의령군(18위)이 재정분권 순위는 15번째로 나타나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에 비해 앞서 있는 것이 확인됨
 - 이는 의령군의 자체수입이 타 군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자체수입의 확보 여부가 인구보다 재정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더 큰 원인이 됨 의미함
- 경상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들 간 재정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체수입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대부분 유사한 농업에 치우친 기존 주력 산업의 자치단체별 차별화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세외수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자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 투자사업 시설들이 신규 건설되고 사용 유지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감독해 줄 필요가 있음
- 다만 시·군 간 재정자립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군부의 취약한 세입기반을 극복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므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상남도의 행정분권수준은 28.88%에 불과한 합천군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고유사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함안군은 99.81%가 고유사무인 것으로 나타남
 -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의 경우 고유사무가 80%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위임사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국가로부터의 위임사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경상남도 내의 행정분권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유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현재 수행 중인 위임사무를 완전히 이양 받아 고유사무로 재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창원시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수행사무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국가위임사무를 재원과 함께 완전히 이양 받아 고유사무화 함으로써 행정분권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치분권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순위가 인구순위역순과 다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정치분권수준에서 상위 5개 도시인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합천군은 경상남도 내에서 인구가 적은 순서와 유사함
 - 정치분권수준에서 하위 5개 도시인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창원시, 통영시의 경우에도 경상남도 내에서 인구가 많은 순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결국 지방선거의 필요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구가 적을수록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선거에 대한

참여를 높여주는 반면, 인구가 많을수록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고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덜 느껴 선거에 대한 참여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정치분권수준은 최하 60%에서 최고 79.7%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
 - 경상남도 내 시 유형들은 모두 60%대의 정치분권도를 보이고 있으며 군 유형들은 70%대의 정치분권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 유형과 군 유형의 인구 차이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친밀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 정치분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의안을 새로 개발하고, 조례를 재정, 개정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정책개발능력이나 의안처리능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지방의원 2인당 1명씩 보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지방의회의 의안처리나 정책개발과 관련한 주민 홍보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의회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자치제도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중·고등학생 때부터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는 국외 선행연구들을 따라 지방분권을 재정, 행정, 정치 영역을 나누어서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권수준을 측정하였지만 다음의 한계점이 존재함

- 우선 각 영역 별 하나의 지표만 이용하여 분권수준을 측정하고 있어 다른 지표를 이용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재정분권을 재정자립도와 일반재원 비중, 지방세 비율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행정분권의 경우 지방정부의 인사규모, 지방배치 국가 공무원 비율 등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들을 함께 이용하여 분권수준을 측정할 경우 더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정치분권의 경우 선거 투표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노령층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정치분권 결과는 해당 지방 의원들의 정책개발능력 및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관심도 뿐 아니라 인구학적 요인이 크게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 정치분권의 측정지표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태(조례발의건수, 주민만족도, 의정활동실적 성과평가 등) 및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의 분권 측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일 연도만을 대상으로 분권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분권수준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향후 관련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금창호·강영주·윤태섭(2016). 지방분권 실태 진단분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배(2005).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 김익식(1990).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에 측정. 한국행정학보, 24(3): 1373-1398.
- 박미옥(2005).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재정분권화.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3): 1-33.
- 박정수(1993). 재정부권화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7(1): 157-183.
- 손희준(2011).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지방재정 분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세미나.
- 박재희·김지수(2020).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광역시-군구 사무 이양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원구환 (2004).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4): 51-70.
- 임명배(2004).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재정논집, 18(2): 23-48.
- 홍준현·하혜수·최영출(2006). 지방분권 수준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의 개발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0(2): 7-30.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개정, 자치부권 확대 기틀 마련」.
- Harguindéguy, J. P., Cole, A., Pasquier, R. 2021. The variety of decentralization index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gional & Federal Studies*. 31(2): 185-208.
- Nguyen, P.D., Vo, D.H., Ho, C.M., Vo, A.T. 2019. Fiscal Decentralisation and Economic Growth across Provinces: New Evidence from Vietnam Using a Novel Measurement and Approach. *Journal of Risk Financial Management*. 12(3): 143.
- OECD, 2019. Making Decentralisation Work: A Handbook for Policy-Makers. OECD Multi-level Governance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 Rodríguez-Pose, A., Ezcurra, R. 2011. Is fiscal decentralization harmful for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the OECD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4): 619-643.
- Schneider, A. 2003. Decentralizati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8: 32-56.
- Vo, D. H. 2009. Fiscal decentralisation in Vietnam: lessons from selected Asian nations.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14(4): 399-419.
- Marks, G., L. Hooghe, and A. H. Schakel. 2008. Measuring Regional Authority. *Regional & Federal Studies*. 18 (2): 111-121.